



윤석열 정부의
모순과 위기 2~3면
경찰의 집회·시위
폭력 진압 3면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6면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8~10면

그리스 시리자의 실패 12~13면
스페인 지방선거 결과 13면
튀르키예 대선 결과 11면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전광훈 세력 등의
무슬림 배척 15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6, 15면



우크라이나 전황 4~5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5면

윤석열은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관련 기사 2~3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저항해야 한다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문성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여전히 부정 평가가 50퍼센트를 넘고, 이 추세는 지금까지 윤석열 임기 내내 지속되고 있다. 부정 평가 안에서도 “매우 잘못된다”가 “잘못하는 편”이라는 평가의 곱절을 넘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기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조차 전체 평균보다 윤석열 긍정 평가가 낮고 부정 평가가 높다.

본질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 서 비롯한다.

지난해 윤석열은 금리 인상, 물가 폭등을 부추기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에 매진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취임 1주년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집권 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한 대답(35.6퍼센트)이 좋아졌다는 대답(8.6퍼센트)의 4배였다.

윤석열이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잘한 분야가 없다”가 4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은 이런 불만에 대처하려고 법·질서 명분으로 서민·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은 노조 투쟁에 강경 대처할 준비가 안 된 집권 초반 화물연대,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이 갑자기 떠오르자 당황하며 양보를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는 했던 양보마저 거둬들이고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심지어 건설노조를 향해서는 “200일 전쟁”까지 선포하며 괴롭히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은 단호한 우파 지도자 행세를 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킨 덕분이다.

그런데도 최근 윤석열의 연이은 개



윤석열은 단호한 우파 지도자 행세를 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위기와 모순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혁 법안 거부권 행사가 그의 최근 지지율에 별 타격이 되지 않은 것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전으로 민주당의 한계와 위선이 드러난 탓이 크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입법안들이 서민층 전반이 겪는 핵심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못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피해 당사자들에게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다가 누더기 법이 된 탓이다.

재산권과 재정 긴축을 중시하는 윤석열의 책임을 흐릴 뿐인 여야 협치 부재 얘기를 하지 말라. 여야 협치를 안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선 정치 갈등(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재계의 반대가 심한 노란봉투법은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다.

노조 때리기로 윤석열 지지율 상승?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이 반노조(노조 혐오) 정서 때문이라고 말한다.(일명 “때리면 올라간다”)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노조 때리기는 지난해 12월 이후 점점 더 강경해졌다. 그러나 그기간 동

안 윤석열의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했다.

최근 정부가 건설노조 파업 집회를 거세게 비난했지만, 그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긍정 평가자들 중 노조 대응을 긍정 평가 이유로 꼽은 것은 3퍼센트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긍정 평가가 36퍼센트였으니, 그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약 1퍼센트뿐이다.

기업주와 우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신념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당연히 환호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노조 혐오 정서가 퍼져 있지는 않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 여러 사회 집단들의 활동과 정체성이 다원화되고, 노동조합도 대체로 경제적·부문적 활동에 매진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노동조합은 대개 이익단체로 여겨지므로, 대중에게 특별하고 일관된 존경이나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

때로는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파업까지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모순된 의식을 노동계급 대중 자신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운동이 자신의 조건 개선 투쟁과 전세 피해, 물가 폭등 같은 정치적 문제들을 결합시켜 정치적인 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을 대중의 노

조 혐오 정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도 다르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노동자 투쟁을 노조 내부로부터 자제시키는 보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자 투쟁 자제 요구는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윤석열 심판 야권연대’ 결성을 위해 민주당이 불편할 만한 수준으로 투쟁이 전개되지 않게끔 하려는 온건파들의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진보’ 포퓰리즘 전략은 윤석열에게 반격의 시간을 벌여줄 뿐이다.

지속되는 객관적 문제들

사실 윤석열의 지지율 추이보다는 그의 정부가 처한 모순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은 미국의 대북 핵우산 강화 등을 얻어낸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로 고조된 안보 위기감 때문에 미국의 안보 보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평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대일 굴욕 외교 논란, 대미 퍼주기 외교 논란 속에서 잠시 흔들렸던 보수층이 확고한 친미 안보 노선에 안도하며 다시 결집한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 위기의 근저를 이루

▶ 3면으로 이어짐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분향소를 지키려 하자 경찰은 노동자를 하나씩 끌어냈고 4명이 연행됐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몽둥이를 휘둘렀다.

5월 30일 경찰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 높이 7미터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마구 때려 끌어내렸다. 김 사무처장은 머리가 깨져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제압당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측의 비정규직 차별에 항의하고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었다.

그 전날인 29일에도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바닥에 짓이기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폭력 진압을 예고하며 고공 농성장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려 하자 이를 막아섰을 뿐이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패는 지팡이가 경찰의 본질임을 여실히 보여 준 사건들이다. 경찰은 결코 개혁될 수 없다.



5월 30일 고공 농성 중에 경찰 폭력을 당한 금속노련 사무처장



5월 31일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지키려는 노동자들과 강제 철거하려는 경찰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위기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항 분위기를 미연에 단속하기

최근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대중에게 인기

가 없다.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대중적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여당이 주도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피해자들을 빛의 구렁텅이에 방치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저변에서 부글부글

끓는 반윤석열 정서가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집회·시위로 터질까 봐 부심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7월 시기 집중 파업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항의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여는 등 선봉에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구실 삼아 투쟁 분위기를 차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경찰청장 윤희근은 5월 16~17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과 도심 노숙 농성 이후 매일같이 노동자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5월 23일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도심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이며 “확성기 소음·도로 점거 등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 해산 훈련을 재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 집회·시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경찰 폭력을 내세워 추진하려는 반노동·반서민 정책과 평화 위협 정책에 대중의 반감이 크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제대로 반격에 나서지 않으면 우파 정부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 노동운동은 경찰 탄압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김승주

▶ 2면에서 이어짐

는 객관적 모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군국주의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윤석열의 노선이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위기와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문제, 미·일의 자국 우선주의 문제 등 한국이

직면한 모순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중국은 고위 외교 관료를 한국에 보내어 보복 가능성을 담은 경고를 전달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수요를 대체하면 안 된다고 한국 측에 경고했다.

윤석열의 대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도 뒤따를 수 있다. 모두 위험한 선택들이고, 대중 정서와도 유리된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와 서민 생계 위기에서 회복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인용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경제 회복”이었다.

따라서 윤석열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윤석열 지지율의 출렁거림에 일희일비하거나 총선을 기다리며 투쟁을 자제할 게 아니다. 생계 위기, 친서방(일본 포함), 각종 탄압 문제 등을 서로 연결시켜 저항을 전면화하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임박 치명적 확전이 예고되다

김인식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5월 3일 러시아군이 크렘린(대통령궁)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를 격추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를 대통령 암살을 위한 테러로 규정했다.(윤종계도 당시 푸틴은 크렘린에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에 미사일 18기를 발사해 민간인들이 다쳤다.

사흘 전인 5월 30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무인기)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민간인 거주 건물들을 공격했다.

전시 상황에서는 교전국 주요 도시들을 폭격하고 적 지도자 암살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처럼 간주된다.

그래서 서방은 ‘자유 러시아 군단’과 ‘러시아 의용군’이 러시아에 침투해 전투를 벌인 것에 환호했다. 이들은 파시스트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친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인데, 미국 군사 장비를 사용해 확전을 촉발할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5월 29일 최고사령부 회의에서 “대반격 시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대반격”은 유혈난자한 제국주의 간 전쟁에서 또 한 번의 치명적 국면 변화가 될 듯하다.

미국 등 나토는 “대반격”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이면서도 어쨌든 불가피하다고 보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서방은 어쨌든 “대반격”을 통해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투자 수익’을 거두고 싶어 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서방 정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우리의 파트너이자 친구인 나라들에서 반격에 대한 기대가 과하고 과열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대반격”의 공식 목표는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수복이다. 2014년 이래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도 목표다.

그러나 현실적 목표는 그보다 낮을 듯하다. “비공개 자리에서 몇몇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은 ... 러시아로부터 점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의 한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의 폭격으로 불타고 있다

령지를 수복할 수 없을 듯하다고 인정했다.”(<파이낸셜 타임스> 5월 13일 자)

세바스토폴(크림반도 최대 도시) 해군 기지는 러시아 해군이 흑해뿐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지중해와 인도양에 진출하는 데에 필수적인 핵심 군사시설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완패를 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할 가망성은 크지 않다. 젤렌스키와 나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일차적인 작전 목표는 크림반도의 육로 봉쇄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루한스크 · 자포리자 · 헤르손)를 잇는 육로 회랑을 점령해 두 지역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완전 무장 우크라이나

나토의 진정한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토는 러시아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중화기 · 드론 · 장거리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상 최대 핵 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공공연한 대결로 비화됐다.

2월 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4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첨단 지대공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가 인도됐다고 밝혔다.

며칠 뒤 40여 개국 국방장관들이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논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방공 체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바이든은 유럽 동맹국들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나토(와 한국)의 무기로 준비한 “대반격”은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를 가져오는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서방의 새로운 공격 요구는 더 많은 학살을 뜻할 뿐이다.

요새 구축 러시아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패배 일보 직전에 있는 듯하다고 보도한다. 젤렌스키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약하다면, 러시아가 후원하는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도시)의 점령을 선언할 수 있었을까.

젤렌스키는 처음에 바흐무트가 “합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G7 정상회의에 가서는 인정했다. “바흐무트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됐다.”

폐허가 된 바흐무트는 러시아의 패배가 임박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은 젤렌스키를 만나 러시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러시아가 비록 구식일지라도 충분한 장비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벨은 나토 군사위원장을 지낸 퇴역 장성 출신이다.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격퇴할 준비를 해 왔다.

2022년 9월, 러시아의 점령지 도네츠크 · 루한스크 · 헤르손 · 자포리자에서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그 뒤 러시아군은 이 지역들에 요새를 구축했다. 전차나 장갑차가 빠질 만한 크기의 참호를 몇 겹씩 파고, ‘용의 이빨’(철선과 지뢰를 결합한 피라미드 모양의 대전차 방어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

요새 구축이 공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요새들은 적의 진군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 되면 러시아 공군이 반격할 시간을 벌게 된다. 러시아 공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의 하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푸틴은 나토의 확장 계획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지키려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 · 국제법 · 민족자결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동유럽과 나머지 세계에 대한 분할과 통제를 둘러싼 미 · 러 두 핵 강대국 간의 제국주의 전쟁이다.

재건 참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은 국제적 갈등을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

“평화 구상”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인도 간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의 80퍼센트가 중국과 인도로 향한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젤렌스키와 따뜻하게 악수했지만,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말로는 중국의 평화 중재를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중재(독일과 프랑스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에 불안감을 느낀다.

러시아에 대한 포위·고립이 미국의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제일 경쟁자인 중국을 포위·고립시키는 과제보다 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주 대만 외교부장은 대만 보호를 위한 미

국의 핵 우산 제공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 되면 미국과 중국의 재앙적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중국의 전쟁 중재가 통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전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돼도 양편 모두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가 “여러 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방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속으로 스스로 더 깊숙이 연루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명분으로 군사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보시오.)

서방(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더 많은 난민을 양산할 뿐이다.

서방의 전쟁 노력과 윤석열 정부의 서방 지원을 반대하는 운동을 굳건하게 건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군사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5월 23일(현지 시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를 만나 업무 협약을 맺고, 폴란드 고위 관료들과도 면담했다.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필요한 재건 사업 내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통째로 건네받았다고 한다.

그 한 주 전인 5월 16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우크라이나에 12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고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누군가의 끔찍한 죽음과 고통이 기업인들에게는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건 사업 참여는 군사 지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재건 사업에서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노무현 정부도 “재건 활동 중심의 비전투 부대”라며 파병을 정당화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침공을 자행한 쪽은 러시아다. 그러나 서방은 그 침공을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를 대가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는 여기에 일조하며 나쁜 권력과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재건 사업과 군사 지원이 분리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휴전을 기다리지 않고 재건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젤렌스키가 공언한 바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부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도 <폴리티코>에 이렇게 말했다. “유럽의 몇몇 파트너들은 지금 재건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히 올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어느 쪽도 패배할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 충돌이 쉽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의 최전선에서 상시적으로 전쟁 상태인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

이는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가 ‘거대한 이스라엘’을 우크라이나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수많은 인프라와 주거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재건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조차 전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이끄는 서방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 러시아 억제 정책의 효과를 과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전후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후원을 받으며 IT 기술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곳으로 재건될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 없을 것이다.

젤렌스키 정부는 지난 2월 JP모건 체이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건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세계 최대 투자은행에게서 듣기 위해서다.

좋은 사업 기회

젤렌스키는 JP모건 체이스가 불러모은 국제 투자자 200명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업과 투자가 한쪽에만 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을 뜻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재건회의는 “비핵심적 기업들의 민영화”와 “국영 기업의 최종 영리기업화,” 노동자 권리 삭감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6월 21~22일 런던에서 열릴 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서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재건’을 추구할 것이다.

사실 우크라이나재건회의는 원래 전쟁 전부터 해마다 열리던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에서 이름을 고친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는 우크라이나 관료들, 유럽 연합, 나토, G7 등이 참석해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서방과의 경제적 통합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단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에 관여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과 위상을 높이려 한다. 5월 26일 원희룡은 베를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재건 기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경제적 진출, 이익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제적 연계를 더 강화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에 기여해 국제적 갈등을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하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내고 참가했고, 간호대학생들도 많이 참가했다.

간호협회는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 부결에 동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고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도 지속할 예정이다.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을 선언한 이후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닷새 만에 1만 2000건을 넘어서었다.

의료기관에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는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잘 보여 준다. 의사 부족과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때문에 피고용자인 간호사들은 온갖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내몰리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상업화와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료기관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역대 정부들은 복지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며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 관행을 묵인해 왔다.

현재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은 신고와 언론 발표를 통해 인력 부족, 특히 의사 부족에 따른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과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모호한 법적 지위 문제를 부각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고 있다. PA 업무가 별도 면허로 인정되는 해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을 값싸게 메우는 방편으로 간호사에게 임의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떠넘겨 왔고, 정부도 이를 묵인해 왔다.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으로 정부가 의사 부족, 특히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최근 응급실 뱅뱅이 사건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른 것도 이런 여론을 키우고 있다.

5월 25일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쟁점이 던진 3대 핵심 과제로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PA 간호사 불법의료 근절, 간호사당 환자비율 1:5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꼽으며 정부에 해결을 요구했다. 의사인력 확충, 간호사 처우 개선책 실행을 촉구하고,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불법의료 관련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6월 8일 서울 도심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7월에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 거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재정 긴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동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은 단 한 명도 증원되지 못했다. 5월 23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병원 정원 동결을 규탄했다.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도 사기에 가깝다. 이미 공공의료와 노인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고,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부족해지면서 더한층의 복지 삭감이 예고되고 있다. 며칠 전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 회의에서 현금 복지 축소,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강조한 것은 이를 나타낸다.

간호법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론, 민주당도 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별로 내놓지 않았다.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책은 거의 들어 있지 않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생색을 냈을 뿐이다.

노동운동이 복지 삭감에 반대하며 공공서비스 확대, 인력 충원 등의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정진희



5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크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2)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23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치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법안이 2월 21일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사용자들은 1989년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해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198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조사된 손해액은 약 3200억 원에 달하는데 손해는 대부분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집한 197건의 손해가압류 사건 기록 중 94.9퍼센트가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배를 청구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 넣는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2012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는 손해가압류 압박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2009년 대규모 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잇따른 비극은 또 어떤가.

아쉽게도 이번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손배 폭탄’으로 임금이 가압류되고 힘겹게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엔 많이 부족하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손배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원 개인 부과 금지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며 민주당이 후퇴안(개인별 손해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을 정의당에 제안했고, 정의당이 이를 동의해 줬다.

합법 노동 쟁의의 범위는 다소 넓어졌다(임금 체불, 개별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불이행 등).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아진 점이다. 원청사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야 사용자로 본다는



‘손배 폭탄’을 맞은 노동자들의 고통은 윤석열의 안중에 없다

까다로운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말이다.(이 점도 정의당을 포함한 노동계의 원안에서 후퇴했다.)

손배 폭탄

그런데도 정부·여당, 사용자들, 친 사용자 언론들은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지키기 법”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손해 소송 151건 중 94퍼센트, 손해 인용액의 99.9퍼센트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청구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다수의 노동 쟁의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비록 오늘날 민주노총의 전투성은 노조 상층 간부들의 부문주의와 자기제한적 투쟁 때문에 과거 한때보다 많이 약화됐지만 말이다.

윤석열은 노란봉투법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는 등 호들갑을 떨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파업이란 어불성설이다. 파업은 그 정의상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윤 생산을 멈춰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정부)를 압박해 양보를 강제해 내고자 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는 처리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밀어붙이냐며 위선을 파고 들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을 압박해 본회의 처리 협상 과정에서 법안을 더욱 누더기로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거부권

한편, 경총 등 6개 사용자 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원청사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 쟁의 요건 확대를 문제 삼는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에 나서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면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극제가 될까 봐 염려한다. 그간 간접고용·특수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해 이윤을 늘려 왔는데 이에 제약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올해 초 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 원청이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더욱 민감한 듯하다.

민주당은 벌써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조속한 처리’ 방침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은근슬쩍 후퇴했다. 여

기서 말하는 ‘국민’이 기업주들이라는 것은 뻔하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전략을 사용하지만) 자본가 계급에 주로 기반을 둔 정당으로 사용자들의 이윤을 중시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민주당은 환노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를 삭감해 왔다. 공교롭게도 손해가압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건들(배달호·김주익 열사)도 민주당 정부 때 일어났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안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난에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불법 파업’에는 손해가압류 방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셈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렇게 말했다. “손배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폭력 파업이라면 슈퍼 울트라 노란봉투법이 있더라도 손해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타협에 결정적 허점이 있다. 손해가압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왜냐하면 ‘합법’으로 용인되는 파업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일터를 점거하거나, 정부 정책에 맞서거나, 사회·정치적 요구를 내걸면 죄다 불법으로 낙인 찍힌다.

가령,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작업장 점거,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일부 점거해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하자, 사측(당시 산업은행)과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노동자 5명에게 무려 490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노동자 5명의 임금을 대폭 올려서 연봉 1억 원을 받는다 해도, 각각 1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운임제 등에서 거둬 드려냈듯이, 국회 협상으로는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을 추진하지 못한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내 개혁(용인되는 개혁만 추진)을 추구하는 정의당의 입법 전략이 갖는 근본적 약점을 보여 준다.

노란봉투법이 후퇴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제압하려면, 국회 울타리 밖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신정환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국제연락간사

이 글은 5월 3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발언이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의 대응으로 ‘대중주의’나 ‘대중 영합주의’라는 순화어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주의’ 또는 ‘대중 영합주의’는 정치 분석에서는 별로 유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도대체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많이 득표하고 싶은 정당치고 대중에게 영합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약속들을 내놓지 않는 정당들이 있나요?

‘국민’,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어쩌고 하지 않는 정당을 보셨습니까?

당장에 우익 정당인 여당조차 당명에 ‘국민의 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그러나 대중에게 영합하려고 기성 정당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모두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도 당의 인기가 높지 않고 거의 바닥을 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힘이 청년을 많이 팔아먹었어도 청년들 사이에서 국힘의 인기는 이제 거의 바닥입니다.

‘국민’과 관련된 상투적인 문구 사용을 되도록 피하고 서민, 평범한 시민, 민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좌파 세력인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좌파의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우파 정당들의 포퓰리즘은 미사여구에 불과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거의 언제나 자본가 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을 가리킵니다.

반면 좌파 세력은 서민, 평범한 시민, 민중의 이익 도모에 진심입니다.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좌파의 포퓰리즘은 심지어 집권 전략입니다.

좌파 전체가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좌파의 전략입



좌파적 포퓰리즘은 계급 적대 문제를 ‘민족 굴욕’이나 ‘재벌 폐해’ 등으로 비틀어서 표현한다 3월 6일 진보당 기자회견

니다. 하지만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갓 신흥국 처지를 벗어난 선진 경제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좌파의 다수가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흥국이나 신흥국 처지를 벗어난 지 오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식민 지배와 독재정권과 재벌 등 부패한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좌파적 포퓰리즘이 표방하는 대표적 기치들과 요구들은 진보, 남북한 화해와 통일, 재벌 지배 청산, 독재와 일제 지배 역사 청산, 주권 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이라는 목표에 비춰 보면 완전히 부차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조차 과연 포퓰리즘 전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줌의 부패한 엘리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민중들/시민사회가 계급을 초월한 단결을 이루면 쉽게 풀릴 듯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점, 곧 **전략으로서** 좌파적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춰 발제하고자 합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적 포퓰리즘이란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당 개혁파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에도 많고,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 속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개혁파 속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고, 관용과 개인 자유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고, 관용과 개인 자유가 구현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점은 자유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초고 격인 저작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즉 《그룬트리제》에서 공산주의를 지칭해 “자유로운 개별성”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적 이상이 인간

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결정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17세기 중엽 영국 혁명부터 18세기 중엽 미국 혁명,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까지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 시대의 산물입니다. 절대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부과한 장벽들을 깨뜨리는 투쟁으로부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과제를 떠맡으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이상은 프랑스 혁명의 기치인 자유, 평등, 연대, 그밖에 생명, 행복 추구 등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이러한 이상들은 착취와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유주의의 약속은 급진화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유주의를 단순히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의 이상들은 자신이 목표로 삼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마르크스는 이 이상들을 현실



2020년 '최저임금 쟁취, 재벌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화하는 데에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현실적 수단은 바로 노동계급의 대규모 집단행동과 혁명적 정치조직의 노력이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특히 그 모순들을 분석하고 제1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자유주의의 약속을 자유주의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사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혁명적 사회주의가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 좌파적 포퓰리즘의 핵심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자유주의의 한계 안에 가두려 하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배신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이 근래처럼 무기한 퇴색하게 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 자유주의의 적들, 특히 파시즘과 극

우를 통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주의적 좌파의 취약성으로 인해 우리는 이런 위험을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여러 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스트들이나 극우보다 낫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또, 기성 제도를 지키려 하고 우파적 사상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보다도 낫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우익이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건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보수 우익보다는 조금 나을지라도 자유주의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대표하는 세력이 한사코 지키려는 사회 시스템을 폐지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하도 모순돼서 일관성 없는 나머지, 자유주의자들이 그 동기대로 이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자유주의가 선호하는 접근법은 정의·권리·인권 사상과 인권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과 제도가 형성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세계의 지배적 초강대국 지위를 확립하려고 기울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수행한 정치 투쟁의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실제로 있는 인권 조약들에는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가치들(가령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 즉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이 인권 원칙 속에 자리잡도록 서구 정부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서구식 권리 담론은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는 원자화된 개인들로 취급하고,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권리들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우선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권이나 생존권 같은 권리들은 자유 시장 원리에 종속되게 했습니다.

이제 인권 유린을 막으려면 시장 원칙에 맞서야 합니다. 이 점은 요즘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보상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주거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국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전세 사기특별법은 재산권을 존중하느라 전세 보증금 되찾아 주거를 보장해 주는 일을 완전히 불만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도좌파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유주의자들과 공조하다 보니 전세사기특별법 문제를 놓고 어정쩡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좌파적 포퓰리즘 전략의 난점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인권 담론의 모순들과 모호함 때문에 그

담론 실천의 비일관성에 말려드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도 인권 운동가들은 안타깝게도 각종 인권법 제정을 여전히 최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진정한 요인들은 구조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의도와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는 체포할 수도 없고,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인권 침해를 못된 개인(들)의 행위(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합니다. 즉, 정부와 기업들이 일상으로 저지르는 대량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거나 적어도 그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들도 심각하게 침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기업들과 정부들이 그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또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한 정부들이 정치적 억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들도 더욱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곳곳에서 정부들이 법·질서를 강조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곧 모든 권리들이 침해받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침해에 맞선 수많은 고립분산적 저항들은 고층들과 불만들의 자본주의적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되는 시시포스의 노동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 되면, '해도 해도 안 된다'는 사기 저하가 광범하게 일어나게 되기 쉽습니다.



최근의 집회·시위 권리 후퇴는 세계적 흐름의 일부이고 그 뿌리는 자본주의 자체다

1920년대~30년대 파시즘에 맞선 사회주의자들의 대응

이제 좌파가 자유주의 세력과 전략적 동맹을 하는 것이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에 맞선 효과적 계획이 못 된다는 것을 100년 전 이탈리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르자 멜로니라는 파시스트가 이탈리아 총리가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시사점도 있을 것입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과 함께 유럽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유럽 혁명은 1923년 10월 독일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6년 사이에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중 위험하고 매우 중요한 고비가 1920년 가을에 벌어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패배하면서 이듬해인 1921년 초부터 파시즘 운동이 급성장한 사태였습니다. 그해 중엽쯤 무솔리니의 파시즘 운동은 위협적인 대중 운동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사회당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가 파시즘의 위협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 줄 걸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공산당은 자기네 혼자서 파시즘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좌파 정당들이 이렇게 대응한 결과 1922년 파시즘이 승리를 거둬 왕과 주류 자본주의 정당들의 낙점으로 정부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 독일에서는 공산당이 1921년에 이탈리아 공산당이 범한 종파주의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그릇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공산당은 공산당 계열이 아닌 노동단체들과 만나치 공동행동 구축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그들대로 공산당과의 공동행동을 거절했습니다. 노동계급 연대가 없다 보니 너무도 손쉽게 히틀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5년부터 코민테른과 프랑스·스페인 등지의 각국 공산당들은 사회당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



파시즘 저지 등 민주적 권리 방어 투쟁에서도 노동계급의 힘이 중요하다 — 1922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에 맞서던 노동자들

자본주의 자유주의 정당들까지 포함하는 걸로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동반자로 격상되다 보니 연대·연합이 의회 중심, 선거 중심이 됐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이라는 목표는 완전 실종됐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 내 자유주의 세력과 정치적 동행을 하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지키는 것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1921년부터 1936년까지 15년간의 첫 파시즘 경험에 사회주의자들이 대응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파적 고립주의.

둘째, 자유주의 세력과의 개혁주의적 포퓰리즘 전략.

셋째, 노동계급 정당들과 조직들을 대중 행동으로 결속시키면서 노동자 권력을 지향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이러한 구도는 오늘날까지도 반파시즘, 반극우 노선의 대표적 유형들이 돼 있습니다.

오늘날 좌파적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적 좌파

그중 자유주의 세력과의 포퓰리즘적 동행이 오늘날 좌파에서 득세하는 전략이 돼 있습니다.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1936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1973년 칠레에서 혁명적 기회를 놓치고 끔찍한 비극을 빚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제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가장 최근 사례를 들면 며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좌파적 포퓰리즘 정당 스페인 포데모스가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회당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우파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2010년대 중엽부터 급부상해 오다가 한 달 전 더 명백하게 민주당과 포퓰리즘적 동행 노선을 밝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그런 전

철을 밟다가 민주당이 진보 염원 지지층을 배신하는 것을 방조했는데,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난 7년간 한국에서도 정의당과 민주노총, 진보당, 기타 좌파 정치조직들은 포퓰리즘적으로 문제인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비판을 곁들였지만, 우파의 귀환이 두려워서 본질적으로 문제인 정부를 지켜주는 자세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와 국힘을 선거에서 물리치길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자유주의적 후보들을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거구에 따라서는 국힘 후보를 패퇴시키기 위해 심지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 투표장에 가서 투표 용지에 도장 꼭 누르는 일을 넘어 일상으로, 또 때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투쟁할 때 좌파가 자유주의자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려고 강령과 당면 요구와 투쟁 방법과 형태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극우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극우에게 힘을 주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포퓰리즘의 약점 때문에 고비를 맞이하기 시작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일어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 포데모스는 좌파적 포퓰리즘을 표방했지만 실망만 안겼다

도대체 어떻게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선에서 승리했을까?

찰리 김버

20년 동안 집권한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5월 28일 재선해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에르도안은 결선 투표에서 약 52퍼센트를 득표해, 48퍼센트를 득표한 공화인민당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를 눌렀다.

이미 2주 전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이 클르츠다로을루를 앞섰기에 에르도안의 승리가 점쳐졌다. 3위 후보인 파시스트 시난 오안이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에르도안이 승리한 이전 선거보다 표차가 훨씬 더 근소했다.

에르도안은 탄압과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통해 지배했다. 선거 승리 후 연설에서 에르도안은 야당을 비난하고 “성소수자 애호가”라고 헐뜯었다.

국영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에르도안의 선거 운동에 큰 도움이 됐다.

전 세계 독재자들이 에르도안에게 서둘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카타르 국왕 셰이크 타미프 빈 하마드 알타니, 헝가리 극우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기쁨을 표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노동계급과 빈민의 일부를 규합하기도 했다. 에르도안은 이슬람을 탄압하는 억압적인 군부와 야당의 ‘위협’에 맞서 무슬림 권리의 대변자를 자처했다.

에르도안은 지난 20년 동안 나토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대부분 지지해 왔으면서, 위선적이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중재자이자 미국 군국주의의 반대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야당의 혼란과 우경화에서도 득을 봤다.

야권은 1차 투표에서 승리를 기대했다. 클르츠다로을루가 50퍼센트 넘게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선할 수 있다는 여론 조사에 근거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2월 지진으로 최소 5만 명이 사망하고 정부가 그 지진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지만, 단지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고 해서 클르츠다로을루의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클르츠다로을루는 쿠르드족의 권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난민 공격을



사진 출처: NATO/블로커

에르도안은 코로나19, 지진 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았지만, 대안다운 대안이 없어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1차 투표 선거 운동에서 클르츠다로을루는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전 공동 의장 셀라하틴 데미르타스를 석방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는 시민적 권리와 민주적 자유를 방어하겠다는 더 큰 공약의 일부였다.

야당의 혼란과 우경화

그러나 1차 투표 후 첫 유세에서 클르츠다로을루는 입장을 180도 선회해 이렇게 말했다. “에르도안, 당신은 테러 조직과 여러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민에게 비밀 합의를 하지 않았던가.” 2013년에 에르도안 정부가 쿠르드족 무장 운동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단기간 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또 클르츠다로을루는 집권하자마자 “모든 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언했다. 튀르키예에는 시리아 난민 350만 명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있다.

클르츠다로을루는 이렇게 외쳤다. “에르도안, 당신은 국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 없는 양보로 일부 우파를 끌어들이었음에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발했다.

디아르바키르[쿠르드족이 다수인 도

시] 소재 쿠르드연구센터의 레하 루하비오을루 소장은 클르츠다로을루가 우경화하면서 쿠르드 유권자들이 야권 연합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동기 상실은 공화인민당의 정치 담론이 화해에서 안보 정치로 전환한 것에서 비롯했습니다.”

디아르바키르의 1차 투표 투표율은 82퍼센트였는데 2차 투표에서는 76퍼센트로 떨어졌다. 야권을 선호했던 대도시의 투표율도 하락했다.

결선 투표일인 5월 28일은 반정부 운동인 게지 공원 운동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탄불의 유명한 탁심 광장에 인접한 게지 공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위와 소요로 시작된 그 운동은 그 뒤 튀르키예 전역으로 확산됐고,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반

정부 소요로 번졌다.

최근 튀르키예 노동자들은 생활 수준 하락에 맞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선거 운동은 이러한 저항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5월 28일 투표를 앞두고 튀르키예의 사회주의 단체인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이렇게 지적했다. “누가 집권하든 간에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맹렬한 경제적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와 모든 반정부 세력이 인종 차별에 맞서 이주민·쿠르드족과 적극적인 연대를 신속하게 조직할, 단결된 투쟁을 위해 결집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Charlie Kimber, ‘How did Erdogan win the Turkish presidential election?’ (2023, 5. 28) / 번역 박이랑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시리자가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했다.

당시 기업주들과 정부들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해 도처에서 혹독한 긴축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긴축을 끝장내겠다고 공약한 정당이 마침내 집권한 것이었다.

시리자는 긴축에 맞서 투쟁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안적 전략을 제시하는 선봉이 될 듯했다.

시리자의 부상은 그리스에서 분출한 거대한 반(反)긴축 투쟁 물결의 한 표현이었다. 2009~2014년 그리스에서는 총파업이 32차례 벌어졌다.

보건 · 교사 · 지자체 공무원 · 이주 · 청소 노동자들과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위대한 투쟁을 벌였다.

은행가들을 구제하는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우파 여당 신민주당은 2015년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고작 76석을 얻었다.

전통적 좌파 정당이지만 신민주당과 정부에 참여해 긴축을 강요했던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PASOK)은 13석밖에 얻지 못했다.

“그리스사회당화(化)”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언제까지나 정계의 일부일 것처럼 보이던 정당이 궤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하원의원 27명(주로 노동당 좌파 의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동 발의했다. “영국 하원은, 오랜 긴축과 고통의 나날들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시리자의 선거 승리를 축하합니다.”

독일 사회주의 정당 좌파당(디링케)은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리스에서 시작해 유럽을 바꾸자.”

하지만 집권 몇 달 만에 시리자는 우파 정부였던 전임 정부보다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최근 선거에서 현재 집권 중인 신민주당은 지지 기반을 굳힌 반면 시리자의 득표율은 20퍼센트에 불과했다.

시리자의 실패 때문에 사회당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사회당은 6월 25일 2차 총선에서 시리자보다 많이 득표하기를 기대한다.

긴축을 선택하다

시리자는 정부 임기 시작 직후 도전과 선택에 직면했다.

기업주, 금융권, 유럽연합 기구들은 긴축 완화를 쉽사리 용인할 생각이 없었다. 그랬다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이 영감을 얻어 좌파 정부를 선출할까 봐 우려했다.



사진 출처: 시리자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시리자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좌파들이 이제 긴축을 끝장낼 길이 열렸다고 봤다. 하지만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자는 지지자들을 저버렸다. 올해 5월 21일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몰락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오는 6월 25일에 2차 총선을 치른다.) **이사벨 링로즈**가 시리자 몰락의 원인을 살펴본다.

그래서 기업주, 금융권, 유럽연합 기구들은 그리스 유권자들의 표심에 콧방귀를 끼고는, “본보기” 삼아 시리자를 꺾어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당시 시리자 정부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자신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을 만나 “경제 쟁점으로 논쟁”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그저 침묵하며 쳐다만 봤다”고 했다.

바루파키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스웨덴 국가(國歌)를 불렀어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이뤄진 ‘트로이카’는 긴축을 더 많이 실시해서 금융권을 구제하느라 발생한 국가 부채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시리자 정부는

후퇴의 명분을 얻으려 트로이카의 긴축 요구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기층에서 벌어진 대중적 캠페인의 결과로,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카의 안을 61퍼센트 “오해”(OXI, 반대) 투표로 거부했다.

이 국민투표 결과는 트로이카와 결별하고 기업주 · 금융기관 · 부유층에 맞서는 신호탄이 됐어야 마땅했다.

그런 투쟁을 위해서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그리스 투쟁에 연대하고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투쟁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후 며칠 만에 시리자는 꼬리를 내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 공격 —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의료비를 인상하고 교육 재정을 삭감

하는 등 — 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전투 경찰로 진압했다.

시리자가 후퇴하고 배신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리자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나, 다른 인사들의 개인적 견해 때문이 아니었다.

시리자의 후퇴와 배신은 기업주, 금융기관, 기성 체제와의 협력만이 현실적이라고 본 전략 때문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자매 단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회원이자 그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리자는 결코 반자본주의 세력인 적이 없었습니다.

“시리자의 강령은 체제 개혁이었습니다. 국가, 지배계급, 경제 전반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리자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리자는 중대한 분열을 겪었다. 치프라스는 사임을 선언하고 새로 선거를 치러 승리한 후 트로이카와 연금 최대 30퍼센트 삭감안에 합의했다.

시리자는 “자본과 타협”해 개혁을 이루겠다는 도박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이 시리자에게서 거둬 양보를 얻어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

난민 막는 국경 장벽 강화

시리자는 난민 문제에서도 방향을 크게 틀었다. 2015년에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 시리자의 태세는, 난민 환영 입장을 내던 것에서 국경 장벽을 더 높일 방안을 앞다퉈 주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리자는 난민을 억류하는 수용소를 세웠고 튀르키예 · 유럽연합과 이주민 배척에 합의했다. 최근 선거들에서 시리자가 신민주당을 상대로 다룬 쟁점은 [난민 환영이 아니라]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어디서 끌어올지였다.

시리자는 노동조합의 단체 협상을 제약하는 반(反)노조법도 도입했고, 민영화도 추진했다. 시리자의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철도 민영화는 결국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3년 2월 열차 사고를 낳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2019년 총선에서 시리자의 득표는 고작 31.53퍼센트에 그쳤고 정권을 잃었다.

그 후 시리자는 집권 여당 신민주당의 팬데믹 대응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대중에게는 파업 · 시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시리자는 노동자 운동에 거의 모습을

▶ 13면으로 이어짐

▶ 12면에서 이어짐

드러내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비난했다.

그리고 열차 사고 후인 2023년 3월 8일에 노동자 300만 명이 민영화, 임금 삭감, 긴축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을 때도 시리자는 침묵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회원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리자는, 노동계급 투쟁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는 변화를 실현하지도 정부를 타도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리자가 2012년에 최대로 부상했던 것은 시리자가 노동계급 투쟁을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자가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전략에서 멀어진 이유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시리자는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핑개친 것입니다.”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에서는 시리자에 대한 대응을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리스의 많은 다른 좌파들과 달리 시리자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줄곧 시리자에 맞서 선거에 출마한 반자본주의적 선거 연합 ‘안타르시아’에 속해 있었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이견은 투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는 시리자가 연사는 급진적이지만 여전히 의회 정치에 매몰된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치란 막다른 길이죠.

“시리자로의 입당은 의회주의적 활동 방식을 수용하고 그 규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빨리 말이죠.”

시리자가 우경화하면서, [시리자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바루파키스 등 몇몇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보다 “더 나은” 버전의 의회 정당을 만들거나 “시리자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리자 2호기는 그 자신의 기준으로 봐도 실패했다. 바루파키스의 정당 “유럽현실불복종전선”(MeRA25)은 5월 총선에서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거리와 일터에서의 저항

시리자의 교훈은 투쟁으로 정치적 전환을 이룰 수 없다거나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다. 의회를 우선시하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어떤 선거 개입이든 거리와 일터에서의 저항에 종속돼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급의 의식은 급진화하는데 시리자는 우경화하면서 거대한 단절이 생겼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무슬림 혐오에 맞서는 과제는 극좌파가 맡게 됐습니다. 국가 경영에 치중하는 시리자의 전략이 낡은 일입니다.

“현재 시리자는 급격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혁명적 좌파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 시리자에 대한 실망감이 운동·투쟁·저항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그리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 그리스 총리이자 신민주당 대표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는 6월 25일 2차 총선을 선포했는데, 자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리자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리고 시리자 지도부는, 특별한 시기에는 시리자가 지금보다 급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뀐 것은 시리자가 아니라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민주당에 맞서 투쟁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반격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류를 노동계급 내에서 일으켜야 합니다.”

출처 Isabel Ringrose, 'Why did Syriza fail in Greece?' (2023. 5. 27)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시리자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는 올해 초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차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 그리스 열차 사고에 항의하는 2023년 3월 8일 파업 시위대의 모습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5월 28일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연정 소속 주류 좌파 정당들이 참패했다. 이제 스페인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찰리 김버가 좌파의 패인을 설명한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7월 23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여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이 지난 5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절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어제 선거는 지역 단위 선거였지만 투표 결과에 담긴 의미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총리이자 사회당 대표로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한때 급진 정당이었던 포데모스도 참패했다. 이 정당들은 노동계급을 방어하지 않아 심판받은 것이다. 이들은 노동계급을 방어하기는커녕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친기업 정책들을 추진했다.

보수 우파 정당 국민당(PP)이 [사회당이 여당이던] 아라곤주, 발렌시아주, 발레아레스제도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지역들에서 국민당은 파시스트 정당 폭스(Vox)당을 주정부 연정 파트너로 삼을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폭스당은 2019년 지방선거보다 두 배 더 득표해 이제 모든 주 의회에 의석을 갖게 됐다.

국민당은 마드리드 주의회에서 과반 정당이 됐고, 라리오하 주의 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했다.

국민당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 ‘시우다다노스’(시민당)의 몰락에서 득을 보기도 했다. 시우다다노스는 궤멸하다시피 했다.

시우다다노스는 2019년에 190만 표를 득표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고작 30만 표를 득표했다. 그들이 잃은 표는 대부분 국민당이나 폭스당으로 갔다.

그러나 사회당과 포데모스 후보들의 최대 패인은, 사회당-포데모스 연정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 지지한 데 있다. 그러면서 임금을 억제하고 연금 지급액 인상 폭을 물가 인상 폭보다 낮게 유지했다.

포데모스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2014년에 창당한 정당이다. 포데모스 창당은 15-M 운동으로 광장에서 터져 나온, 긴축 정책과 강제 퇴거에 대한 분노를 의회와 지방의회로 가져가려는 시도였다.(관련 기사: 본지 368호 ‘광장 점거 운동에서 포데모스의 좌초까지’)

포데모스의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사회당과의 연정을 맺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포데모스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지의 몇몇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 포데모스는 다른 좌파들과 함께 사회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하위 파트너로 참가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포데모스는 마드리드·사라고사·테네리페·부르고스·발렌시아·바야돌리드·비고·라코루냐 의회에서 의석을 모조리 잃었다.

심판 투표

사회당보다 좌파임을 자처했던 바르셀로나[카탈루냐의 주도]의 정치 세력들도 타격을 입었다.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전 바르셀로나 시장 하비에르 트리야스는 카탈루냐사회당과, 현 시장 아다 콜라우의 좌파 선거연합 ‘바르셀로나 엔 코무’를 모두 꺾었다.

누가 시장이 될지는 선거 후 협상에 달려 있다.

스페인 17개 주 중 12곳의 주의회·주정부를 선출한 이번 선거는 몇 달 후 있을 총선의 판세를 가늠하는 풍향계로 여겨진다.

국민당 사무총장 쿠카 가마라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거대한 푸른 물결”라고 했다.[푸른색은 국민당의 상징색이다.]

보수 우파와 파시스트를 저지하려면 더 우경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는커녕 좌파는 애초에 포데모스를 탄생시킨 거리와 일터의 투쟁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출처 Charlie Kimber, 'Spanish elections: left pays the price for backing cuts and arms spending' (2023. 5. 29) / 번역 김준호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BM의 사례를 과장하지는 말아야 한다. IBM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겠다는 일은 매우 단순·반복적인 사무 행정 업무에 한정돼 있다. IBM의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한 말을 봐도 기술 개발 업무뿐 아니라 경영 지원 부문에서도 직원 생산성 평가나 인력 구성 등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향후 10년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IBM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이다. 이런 기업은 인공지능의 인력 대체 효과를 과장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 봐야 한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잠식해 실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과장이 많다. 이런 과장은 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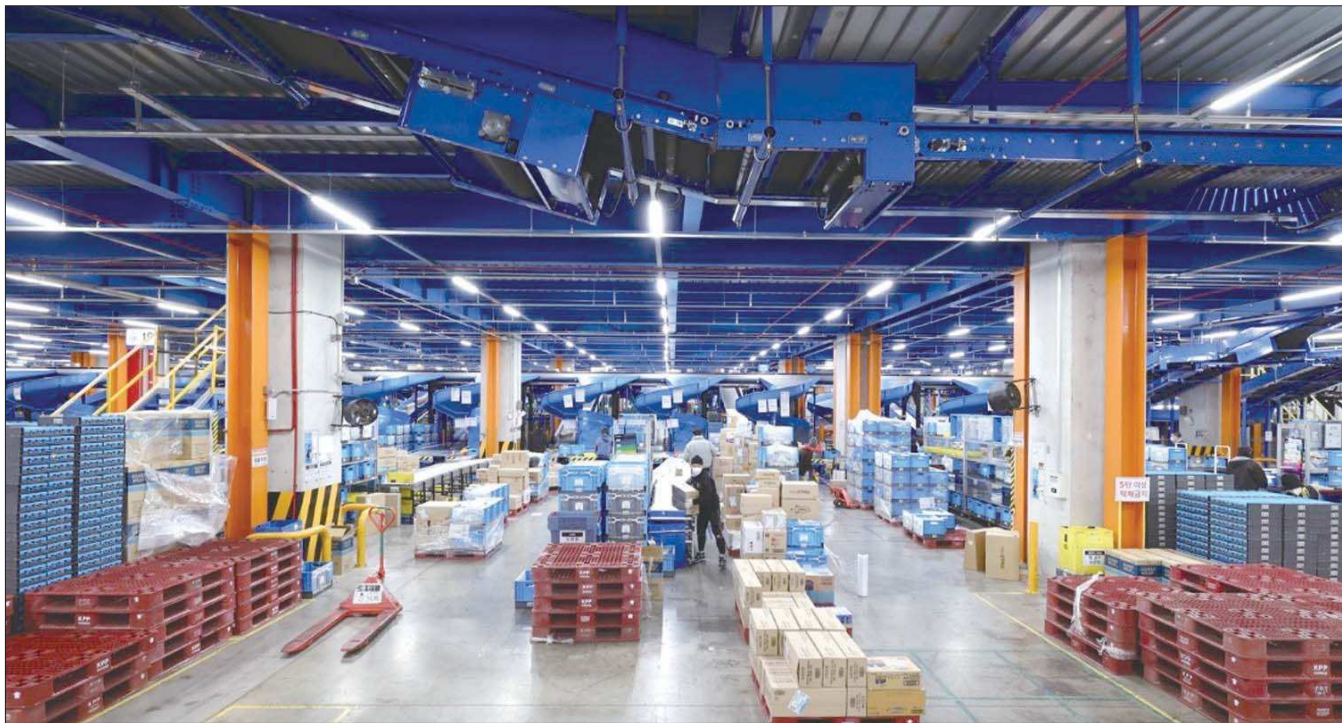
근래의 사례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어났을 때다. 당시 머지않아 자율 주행 자동차가 택시, 트럭 운전수들을 대체하고,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콜센터 직원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대체되고, 컴퓨터가 분석해 주는 자산 관리와 법률 조언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전망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되던 여러 직종에서 인력난이 벌어졌다.

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싸워 봐야 소용없다는 비관주의를 부추기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달랐다.

물론 이런 과장을 지적한다 해서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 간의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문제이다”(마르크스). 쿠팡은 자동화된 시설을 자랑하지만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린다

경쟁으로 인해 기술 발전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은 계속 존재해 왔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 가는 임금(가변자본) 대비 기계 등에 투자되는 비용(불변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이를 자본주의의 일반 법칙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때는 진정한 산업혁명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속도가 더 컸다. 반면 지금은 온갖 과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황 속에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소외

합리적인 사회라면 기술 진보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덜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했듯 “그 누구의 수고를 덜어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 기계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혁신적 기술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실업의 우려 키우기, 불평등 증가로 이어져 왔다.

자동화 시설이 도입된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는 되레 노동 강도 강화가 강요되곤 한다. 자본가들은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쿠팡이 바로 그 사례다. 노동자들의 개인당 업무 할당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노동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다.

노동자에게 생산 현장에서 기술 발전이 의미하는 것은 한 쪽에서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고 다른 쪽에서는 실업자의 양산이다. 둘 모두에서 노동의 소외가 강화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자본주의 체제를 멈춰 세울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생산을 의존해야 한다. IBM도 지난 1분기에만 프로그래머와 고객 응대 부문에서 7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고, 챗GPT를 훈련시키는 것도 노동자들이다. 챗GPT 훈련을 위해 지불된 노동력 비용이 무려 3조 7000억 원이라고 한다. 인건비를 아끼려 주로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을 활용했음에도 말이다.(관련 기사: 최무영,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본지 453호)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을 구현할 반도체를 생산하고,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도 모두 노동력이 들어간다. 각종 무인화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는 말은 곧 그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을 때 생산에 타격을 줄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노동계급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동화 기술로 악명이 높은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곳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노동계급의 이런 힘은 자본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할 때 이에 맞서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진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때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고도의 생산 능력은 비로소 다수의 필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선영

추천 소책자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56쪽, 4,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모금에 나섰고, 2020년 9월부터 2층 61평 면적 규모의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

무슬림들은 마땅히 신앙 생활을 할 자유가 있고, 이슬람 사원 건설도 종교적 자유의 일부다.

하지만 지역 주민 일부가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애초 건축 허가를 내줬던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자신감을 얻은 사원 건설 반대 측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범죄가 늘고 테러가 벌어질 것이라며 차별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극우 개신교 세력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렇게 일시 중단된 공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의 판결로 북구청의 결정이 최종 뒤집히며 재개됐고, 이슬람 사원은 이르면 이번 달 내 완공될 것이다.

홍준표 같은 우파 정치인이 이슬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그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슬람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공격에 앞장서 온 전광훈은 2017년 대선 때 홍준표를 공개 지지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후보라며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자들은 서구 지배자들만큼 무슬림 차별을 핵심 지배 전략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또, 한국의 지배자들은 중동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기에, 국가 기구가 나서서 무슬



무슬림 유학생들과 함께 행진에 나선 경북대 학생, 교수들

림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다.

홍준표 자신도 대구시 차원에서 무슬림 국가들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기업들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려 해 왔다. 그래서 “글로벌 도시 대구” 운운하며, 대구에 이슬람 사원뿐 아니라 힌두교 사원도 들어와야 한다고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홍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그 때문에 홍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광훈 세력과 선을 그으라고 요구하며 당 대표 김기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친전광훈 세력을 비롯한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진영에 개입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에 반대하는 주민측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전광훈이 만든 기독교자유통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자이며, 그 후신인 자유통일당의 현 대표 고영일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전광훈과 같은 극우 개신교 세력은

반공주의, 반동성애, 반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세력을 결집시켜 왔다. 주류 우파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에게 구애하고 협력해 왔다. 홍준표는 전광훈이 주도해 2019년에 결성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기현은 2019년 전광훈이 주도한 집회에 참가해 “전 목사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아첨했다.

주류 우파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극우 개신교 세력이 거리에서 세력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다.

무슬림 방어 연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지난 5월 20일, 대구 도심에서 1500여 명 규모로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슬람 혐오로 결집한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지지율이 높은 대구 지역 등에서 지지층 확대를 노린 속셈일 것이다.

대구 지역 진보 언론인 <뉴스민>의 보도를 보면, 전광훈의 유튜브를 보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주최 측의 집회 홍보 영상에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가 등장해 참가를 독려한다. 2018년 <한겨레>는 이 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성애·난민을 혐오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린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집회 연단에 오른 개신교계 보수 인사들은 이슬람 사원 건설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범죄와 테러가 만연한 “무슬림들의 치외법권”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 측 무슬림들은 지난 7년 동안 대현동에서 신앙 활동을 해왔지만 주민들과 아무 마찰도 없었다고 말한다.

무슬림 인구 증가가 범죄와 테러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무슬림 국가 출신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도 낮다. 유럽의 경우, 극우와 파시즘의 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급진 이슬람주의가 아닌 극우 세력의 테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무슬림 배척에 반대하며 대구 지역의 학생·노동·인권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도 개최해 왔다. 경북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지난 5월 한 달 간 매주 이슬람 혐오에 반대하는 학내 행진을 벌였다.

극우 기독교 세력의 이슬람 혐오와 무슬림 배척은 국내 이주노동자의 적잖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축시키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간질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대구 이슬람 사원이 완공된 이후로도 계속 사원을 문제 삼으며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맞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무슬림 이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이랑

▶ 16면에서 이어짐

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제조는커녕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을 들먹이는 것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2008년 촛불 운동은 그 목표를 온전

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조처라는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거리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초기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물론, 운동

을 촉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했다.

그 운동을 미국산 소고기 수입만 반대한 단일 쟁점 운동으로 축소하려 애썼던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달리, 운동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

부의 교육·보건의료 정책, 민주적 권리에 대한 억압 등에 반대했고, 다양한 운동들을 결집시키며, 그 결론으로 이명박 퇴진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도 윤석열에 맞선 일반화된 운동이다.

장호중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김종오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조차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며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고 안전하다는 말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이전인 2002년에도 도쿄전력은 29건의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조작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1977~2002년 사이에도 보고서 200여 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뒤인 2013년에는 사고 지역에서 다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났다.

일본 정부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 가능성에 눈을 감았다. 거짓말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한 못 본 체 하다가 폭로되면 도쿄전력 측

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안전성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는 어떤가?

IAEA는 핵발전을 정당화하려고 설립된 기구다. 이들에게 후쿠시마는 빨리 잊혀져야 할 사건이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 패널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데이터를 분석해 본 아르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은 IAEA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자체 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기도 전에 도쿄전력 계획을 지지했고 2021년 이후 모든 논의는 오염수 투기를 전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훨씬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IAEA는 도쿄전력에 처리 전 탱크의 내용물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 방류 말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탱크를 추가로 건설할 부지도 있고, 시멘트에 섞어 콘크리트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단지 비용이 더 들 뿐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될 오염수 내 삼중

수소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인 리터 당 1만 베크렐을 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6만 베크렐이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준은 7000베크렐, 미국 기준은 740베크렐이다.

삼중수소, 괜찮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삼중수소가 체내로 흡수돼도 며칠이면 모두 배출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쿄전력 측은 공식 문서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일부는 배출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이론적·통계적 근거는 많다. 캐나다(2016년)와 독일(2008년) 등의 연구에서 선천성 이상과 사산, 소아 백혈병, 암, 염색체 이상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2011년)에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 이하의 방사선 노출은 무해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매우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 노출은 암 발병률을 높인다.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방사

선 '허용치'는 그 수준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일 뿐이다. 핵발전소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허용치가 일반인의 10배 가까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정부가 천연덕스럽게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조선일보> 등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문제 아니라는 듯 몰타기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삼중수소만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인근에서는 최근까지도 세슘 등에 오염된 물고기가 잡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각국의 핵발전소에서도 다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운동과 그 요구(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로는 오염수 방류를 막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확정한 2021년에 문재인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자신도 핵발전소를 짓고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마당에 일본 측이 일본 바깥의 바다를 특별히 더 오염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마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6월 7일(수) 오후 8시

발제 임준형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60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